

□ 최규식 의원 공안문제연구소 관련 문제 제기

- 2004년 9월22일.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토론회 개최
- 2004년 9월22일. 한겨레·한국·오마이뉴스 등 다수 언론매체 토론회 보도
- 2004년 10월9일. 공안문제연구소 내부 제보자, 최규식 의원실에 제보 편지
- 2004년 10월11일. 한겨레·오마이뉴스·CBS 내부제보자 편지 관련 내용 보도
- 2004년 10월11일. 경향·연합, 경찰의 공안문제연구소 분리 독립 검토 안 언론 보도
- 2004년 10월12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공안문제연구소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제보내용관련)
- 2004년 10월 12일. KBS 시사투나잇, 공안문제연구소 관련 보도 (최규식의원 인터뷰)

- 2004년 10월18일. 경찰청 국정감사(공안문제연구소장, 연구원, 법학 교수, 피해자) 증인 신청을 통한 관련 내용 질의 예정

□ 공안문제연구소 관련 주요 보도기사

- 불임 참조

□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토론회 자료

- 불임 참조

> 네이버뉴스 인쇄하기

인쇄하기

닫기

공안문제연구소 존폐도 논란

[한겨레 2004-09-22 18:39]

[한겨레] '이적표현물 감정' 적절성 싸고 토론회 열려

"표현자유 침해" "남북 대치상황" 폐쇄-존속 맞서 꺾어맞추기식 '이적표현물 감정'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안문제연구소의 존폐 여부를 놓고 22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실에서 열린 토론회가 벌어졌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한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명백해야 하는데, 매년 수천건씩 쏟아지는 감정서 어디에도 구체적인 국가안보 위협을 적시하는 내용이 없다"며 "연구소는 양심과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충돌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이 제3자인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함으로써 '전문성'을 얻으려 하지만, 연구소에는 전문가적인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구소의 인적구성부터 업무수행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일반의 검증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94년 대학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이적성 시비로 공안기관의 수사를 받았던 정진상 경성대 사회학과 교수는 토론자로 나와 "당시 수사관들은 마치 연구소의 감정서가 '경전'인양 이를 놓고 신문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동학혁명 대신 북한에서 쓰는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되는 등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기준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반공주의'였을 뿐"이라며 "냉전질서가 해체된 마당에 공안문제연구소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독일에서도 연방헌법수호청이 위헌 및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남북 대치 상황인 한반도에서 연구소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연구관으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 윤황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연구소는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곳으로 국가보안법과는 무관하다"며 "공안감정 업무는 공산주의 사상 연구 등 9가지 임무 가운데 하나일 뿐, 감정기능이 없어지더라도 연구소는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의 감정 실적이 한해 7천~8천여건에 이르는데 건위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건수가 100여건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서는 "최근 친북 사이트 등 인터넷 문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정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은 "공안문제연구소의 전현직 연구원들은 과거에 이뤄졌던 꺾어맞추기식 사상감정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라"고 촉구한 뒤 "국가보안법 폐지 이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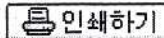
라도 국회 행정자치위가 국정감사 등의 방법으로 공안문제연구소를 감시·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8&article_id=0000079330

 인쇄하기

닫기

> 네이버뉴스 인쇄하기



닫기

출판물 이적성 검열 공안문제研 베일 벗긴다

[한국일보 2004-09-22 18:36]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여권이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22일 17년동안 7만여건의 출판물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감정을 해온 공안문제연구소의 실체를 규명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5공 시절 악명 높았던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있던 **내외정책 연구소가 전신으로 1988년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변모했다.**

연구소는 검·경, 국정원, 기무사 등의 의뢰를 받아 국보법을 근거로 각종 출판물의 이적성을 판정, 사상통제 검열소의 역할을 했으나 실체는 베일에 싸여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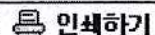
최 의원은 이날 “800만부나 팔린 태백산맥이 이적혐의로 재판 중인 이유를 아느냐”며 “이제는 경찰도 모른다는 연구소가 어떤 규정에 의해 존재하고 사상검증이 유효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사실상 해체를 요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연구소의 이적판정 기준대로라면 국보법을 철폐하려는 정파는 용공분자”라며 “연구소는 국보법이 반인권적 정권 안보법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자의적 운용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연구소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지배정치권력이 원치 않는 비판을 차단하고 국민을 자기검열의 침묵상태로 만드는 사상 공작소”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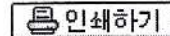
이동국 기자 east@hk.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8&article_id=0000251628



닫기

> 네이버뉴스 인쇄하기



"경찰도 모르는 경찰내의 국가연구소 존재한다"

[오마이뉴스 2004-09-21 18:14]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 2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색적인 토론회가 열린다. 제목은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최로 만들어진 이번 토론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의 주제발제와 정진상 경상대 교수,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박광작 성균관대 교수, 윤환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특히 최근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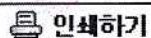
공안문제연구소는 1998년 설립된 이후 17년 동안 약 7만 건에 이르는 출판물에 대해 이적 감정을 해왔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 등 시국사건과 연루된 피해자들은 공안문제연구소를 빨갱이를 양산해내는 '사상 검증소'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최규식 의원은 "왜 800만부가 팔린 <태백산맥>이 이적 혐의로 재판중인지, 도대체 경찰 내부에서도 관련 부서 담당자가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국가 기관 연구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연구소가 존재하는 법적인 근거가 정당한지, 이 연구소의 사상검증은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지를 규명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한기 기자

-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50777



> 네이버뉴스 인쇄하기

인쇄하기

닫기

“좌경·용공 사상진단서 발급 압력 받았다”

[한겨레 2004-10-11 03:09]

[한겨레] “소장 압력-경찰청 입김”

국가보안법 사건의 사상 감정 등을 맡고 있는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가 소속 연구관들의 뜻과 달리 연구소장 등의 압력에 따라 ‘좌익·용공’ 감정을 내리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편지가 공개됐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10일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업무 범위는 의뢰된 개별 문건에 한정돼 있는데, 지난 2002년 경찰청 보안국이 수사한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과 진보의련 사건에서는 많은 연구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장이 조직 자체에 대한 감정을 명령해 관철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공개했다.

당시 공안문제연구소는 두 단체에 대해 각각 ‘친북좌익’, ‘이적단체’라고 감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보안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특이하게도 단체 자체에 대한 감정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 쪽은 “3쪽으로 된 이 편지가 지난 7일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이름으로 의원회관 사무실에 배달됐다”며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전혀 공개되지 않은 역대 소장들의 이름과 이력, 연구소 내부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데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 쪽이 공개한 제보편지는 역대 공안문제연구소장이 대부분 경찰청 보안국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안경찰이 보안사범 5명을 구속시키면 특진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경찰청은 소장한테 압력을 가하고, 별정직 신분의 소장은 직접 감정서 작성에 개입해 ‘좌익·용공’으로 판정되도록 연구관한테 압력을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제보편지는 이어 “만약 경찰이 감정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면, (소장은) 회의를 소집해 ‘우리가 일선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려서야 되겠는가? 경찰이 빨갱이 문건 하나를 입수하려고 목숨을 거는데 이들이 기소할 수 있게 뒷받침이 돼야 한다. 좌익·용공을 많이 잡아줘야 한다’며 재감정을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편지는 또 “소장이 연구관들한테 감정서를 2부 만들도록 한 뒤 하나는 검찰·경찰 등 감정의뢰처에 보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검열용’으로 사용하는 등 감정서 작성에 개입하고, ‘좌익·용공’ 감정 결과가 적은 연구관들에 대해서는 압력과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지는 “88년 개소 당시에는 민간인이 소장을 맡았지만, 이후 보안경찰 출신이 소장이 되면서 감정에 노골적인 개입이 시작됐다”며 “경찰청 퇴직 보안경찰의 자리배치 차원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규석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가 실적을 올리려는 보안수사기관의 입맛에 맞게 감정을 해주고, 수사기관은 이를 이용해 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양산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18일 경찰청 국감에 현 공안문제연구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연구소의 운영 실태, 문건 판정 기준 등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청이나 연구소장이 연구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jeuny@hani.c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8&article_id=0000081292

 인쇄하기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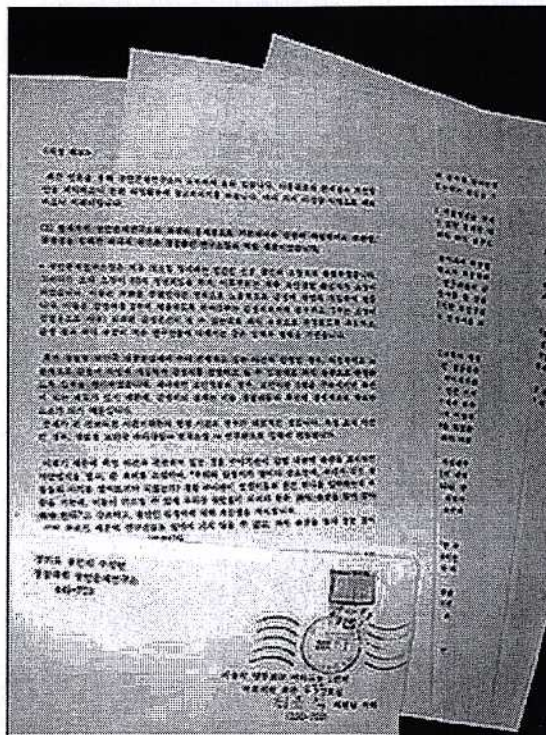
"좌익·용공 판정하도록 압력 받았다" 공안문제연 '사상감정서 남발' 의혹

[오마이뉴스 2004-10-11 15:14]

[오마이뉴스 박형숙 기자] 지난 7일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실로 출판물의 이적성을 '감정'하는 공안문제연구소(소장 전병룡) 내부자로부터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A4용지 3쪽으로 된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현재까지 공안문제연구소의 최대 문제점으로 거론돼온 감정서 작성에서의 객관성, 공정성을 침해한 최대의 원인은 경찰 출신 연구소장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요지는 경찰 보안국 출신의 역대 연구소장들이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등에서 의뢰한 감정 문건을 좌익·용공으로 판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연구원들에게 갖은 압력과 협박을 해왔다는 것. 특히 경찰청 보안국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감정서 작성에 개입해 될 수 있는 대로 좌익·용공으로 판정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 지난 7일 공안문제연구소 내부제보자가 보낸 A4 3쪽 짜리 편지.(연두색은 편집자 강조) ©2004 오마이뉴스 박형숙

그 이유에 대해 "보안 경찰의 경우 보안사범 5명을 구속시키면 특진이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정서의 결과는 이들 경찰관들의 특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내부 제보자는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개별 문건이 아닌 조직 자체에 대한 감정도 하게 되었다고 내부 고발자는 주장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업무 범위는 '공안기관이 의뢰한 개별 문건에 한정해 감정서를 작성하지만 '경찰청 보안국이 공명심을 갖고 수사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연구소장은 오직 경찰청에 잘 보일려는 의도로 조직 자체에 대한 감정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진보의련 사건이나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이 대표적. 이 내부 고발자는 "경찰청 보안국이 신경을 쓰는 조직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청 보안국 수사대장→연구소장→연구관으로 압력이 전달된다"고 주장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 수사기관이 감정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면 야단법석을 떨고, 곧 회의를 소집해 '우리의 감정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일선 경찰들의 사

기를 떨어뜨려야 되겠는가? 경찰 수사관이 빨갱이들의 문건 하나를 입수하는데 목숨을 거는데, 이들이 기소할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좌익·용공을 많이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만인 감정서에 대해 재감정을 지시합니다."

진보의견과 한청 사건에 대해 연구관들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였지만 연구소장은 이를 소장 직권이라고 주장하고 관철하였다"며 "이에 관련한 결재 서류는 연구소 서무과에 보존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출신 연구소장이 경찰청 보안국 수사에 이토록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 내부 제보자는 "과거 인맥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별정직 신분의 소장은 경찰청에서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교체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안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보안국 수사대장→연구소장→연구관으로 압력 전달



최규식 의원은 본지에 이같은 내용의 내부 제보자 편지를 공개하면서 "공안문제연구소가 과거 어떠한 객관성과 기준으로 좌익과 용공의 잣대를 들이댔는지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 유지와 보안계통 핵심세력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강압적으로 좌익·용공이라는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조작해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남영동 대공본실같은 수사기관 입맛에 맞게 감정을 해주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감정결과를 가지고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행자위 소속인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직 연구소장과 연구관 1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 18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경찰청장과 이들 증인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규식 의원은 지난달 22일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최초의 공개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감정서를 발급하는 연구관이 직접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이적표현물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정진상(경상대 사회학과) 교수의 연구소 철폐에 맞서 반박 토론을 벌였다.

공안문제연구소의 업무에 관해 연구소측은 △좌익이론에 대한 비판논리의 연구와 대

응은 제시 △국내 좌익세력의 실상과 전술의 실태 파악 △공안관련 정책방향 제시와 대안개발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중 문건감정이 업무의 대부분으로 16명의 연구원은 평균 하루 2건의 문건을 감정하고 좌익성·친북용공성·용공성·반정부성으로 분류한다.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는 5공화국까지 치안본부(현 경찰청) 산하 남영동 대공분실 내에 설치되어있던 내외정책연구소가 민주화 바람과 함께 1988년 10월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변경, 설치된 것.

공안연구소는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정원보다 더한 '음지'의 공안기관.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의 감사를 받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청 소관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나 문제점들이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 의해 '빨갱이 양성소'로 여겨지는 공안문제연구소는 시민사회 단체가 줄기차게 감정목록의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3급 국가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감정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이력에 대해서도 연구소측은 학력을 제외하고는 이름조차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



▲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9월 22일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연구소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연구소장직 걸로만 '공채'?
경찰청 보안국 출신 퇴직자들이 차지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공안문제연구소 내부제보자의 편지에 따르면 연구소장(2급 별

정직)의 채용은 외부 공채가 원칙이나 "경찰청 보안국이나 경찰청 출신의 퇴직 경찰관의 자리 배치 차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경찰청장과 경찰청 보안국의 눈치를 살피는 데만 신경을 쓰다"는 것.

1988년 임명된 초대소장만이 유일한 민간인 출신이고 이후 대부분 보안경찰 출신자가 임명돼왔다. 이 내부제보자는 "이들은(연구소장) 감정서를 2부씩 제출하도록 하여 1부는 감정의뢰처에 송부하고, 1부는 소장이 검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대 소장인 박정섭은 경찰청 보안국에서 잔뼈가 굵은 총경 출신. 이후 부임한 김윤근 소장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을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 1과장을 지냈던 인물로 알려졌다. 김윤근 소장은 소장을 그만둔 뒤, 보안경찰 출신자들의 모임인 총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현재의 전병룡(52) 소장은 전 서울경찰청 차장(2000년)으로 경찰청 정보국장, 경비국장 등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장(1998년)을 지낸 바 있다. /

"소식지, 집회 유인물, 회의록 등 무작위 감정"
한청·진보의련 등 '조직사건' 감정서 공개

공안문제연구소 내부제보자가 보내온 편지에서는 특히 한청, 진보의련 등에 대한 '조직' 감정의 실체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최규식 의원이 지난 달 공안문제연구소측에 이 두 사건에 대한 감정서 목록 일체를 요구했을 때만 해도 연구소측은 "개별 문건의 내용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감정 문건이 어느 사건에 관련된 문건인지 알 수 없다"고 농성을 부렸다.

경찰 보안국은 2002년 전국 53개 단체, 1600명의 회원을 둔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회장 전상봉)과 2001년 현직 의대 교수·의사·간호사·약사·교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 진보의련(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친북좌익·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들 단체에 대한 50~70건의 감정서를 작성했는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 사이에 공유된 각종 '공개'자료에 대해 감정을 단행했다. 소식지, 집회 유인물, 회의록 등인데 2002년 2월 2일자 한청 소식지 2호를 '용공' 문건으로 판정한 감정서(2쪽)의 내용은 이렇다.

"한청 1기 사업을 평가하면서 '연방조국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남한 정부가 자주적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 인식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음. 나아가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 투쟁과 국가보안법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은 또한 북한이 통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음..."


또 진보의련의 경우 '진보의련 조직활동론'이라는 글에서 적시하고 있는 무상의료 등의 주장에 대해 연구소는 "사회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계급투쟁을 보고 있으며 나아가 자본주의에서의 생산관계의 모순의 심화를 역설하고 있는 바, 이는 맑스주의의 사회관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음"이라며 '용공성' 문건으로 판정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도 감정대상(?)에 올랐다. 연구소측은 '창조적 대중으로서의 사이버운동론(초안)'이라 제목의 한청 문서에 대해 "노사모와 촛불시위는 사이버운동의 촉발이며 사이버공간의 정치논쟁은 대중투쟁의 맥락이며 서프라이즈와 오마이뉴스가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중의식화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시켰다"고 요약, 정리했다(2004년 5월 14일 작성).

"따라서 이 유인물은 대중운동으로서의 사이버운동의 필요성과 그 특징 및 관점의 정립이라는 초안으로 제시돼 있으며 그 가운데 자주와 통일의 대중운동으로서의 사이버운동이라는 시사가 담기지긴 했으나 사회주의 찬양하거나 동조했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문건이라 하겠음."

이 문서는 결국 '사회주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문제없음'으로 판정되었다. /

> 네이버뉴스 인쇄하기

 인쇄하기

 닫기

"공안문제연구소장, 외압감정" 논란

[노컷뉴스 2004-10-11 08:43]



↑ (사진=최규식의원 홈페이지)

출판물등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감정하는 경찰청 공안문제 연구소가 상부의 압력으로 편파감정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공안문제 연구소는 의뢰된 개별 문건에 대해서만 이적성 여부를 감정하는데 지난 2002년 한국청년단체 협의회 사건과 진보의련 사건에서는 연구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장이 조직 자체에 대한 감정을 명령했다"는 내용의 고발편지를 공개했다.


최의원은 "보안사범을 5명 구속시키면 특진할 수 있는 제도때문에 경찰청은 공안문제 연구소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며 "이에 따라 보안경찰 출신의 소장은 좌익용공으로 판정하도록 연구관들에게 다시 압력을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보안관계자는 "압력행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그러나 공안문제 연구소의 기능 등을 재조정하는 개편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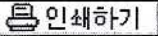

CBS사회부 이기범기자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79&article_id=0000012226

 인쇄하기

 닫기

> 네이버뉴스 인쇄하기

경찰 공안研 분리독립

[경향신문 2004-10-11 07:30]

공안사건 감정 때 ‘편파성’ 논란을 빚은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가 장기적으로 경찰에서 분리 독립된다. 또 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문호를 개방한다.

경찰청은 10일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재조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된 뒤 내년 초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경찰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연구소의 공안사건 관련 연구결과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공정성과 편파성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공안문제연구소를 분리 독립시킨 뒤 공안사건의 비중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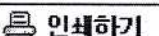

경찰 관계자는 “공안사건과 관련해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외부 지적이 많아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며 “‘보안’ 업무의 비중을 줄여 시비를 없애고 또 그 여력을 치안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5공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 설치된 내외정책연구소가 1988년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변경·설치됐다가 1995년 서울경찰청내 보안문제연구소와 통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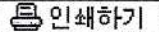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 및 사상검증 과정에 수사기관의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김종목기자 jomo@kyunghyang.com>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2&article_id=0000088403

> 네이버뉴스 인쇄하기

"공안문제연구소 분리독립 검토"

[YTN 2004-10-11 14:30]

[김형근 기자]

경찰청이 공안사건 감정 과정에서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를 장기적으로 경찰에서 분리·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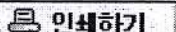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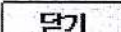
경찰청은 일부에서 이적표현물과 사상검증 과정에서 공정성과 편파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같은 분리·독립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공안사건에 대해 공안문제연구소가 경찰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정을 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5공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 설치된 내외정책연구소가 지난 88년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바뀌어 설치됐다가 지난 95년 서울경찰청 보안문제연구소와 통합돼 운영돼 왔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4&article_id=0000141840

> 네이버뉴스 인쇄하기

인쇄하기

닫기

공안문제연 "좌익·용공 감정서 남발 의혹" 파문 확산

[오마이뉴스 2004-10-13 10:14]

[오마이뉴스 박형숙 기자]



▲ 12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경찰대학교 앞에서 열린 공안문제연구소 규탄기자회견
©2004 민중의소리 한승호

공안문제연구소 내부자가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고발한 "좌익·용공 감정서 남발, 한청·진보의력 등에 대한 '조직' 감정"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 12일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상봉 한청 의장을 비롯해 한청 소속 지역청년회 회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2일 오전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보안국과 공안문제연구소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청 보안국 수사대장→연구소장→연구관으로 이어지는 용공조작의 낯고 음험한 공안사슬은 폐기처분되어야 한다"며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공권력을 빙자한 만행이자 폭거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2002년 9월 전상봉 의장 등 간부 4명이 구속된 이후, 법원은 지난 7월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기소사실을 인정해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현재 한청 사건은 항소 중이다.

공안문제연구소 내부제보자가 최규식 의원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경찰 보안국 출신의 역대 연구소장들은 경찰 보안국 등에서 의뢰한 감정 문건을 좌익·용공으로 판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연구원들에게 갖은 압력과 협박을 해왔다는 것. 그 과정

에서 “보안국이 공명심을 갖고 수사하게 된 한청 사건에 대해 연구소장은 오직 경찰청에 잘 보이려는 의도로” 한청과 진보의련 등 “조직 자체에 대한 감정을 명령”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청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악행이 비롯될 수밖에 없는 원천인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公安문제연구소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출입을 막는 경찰들과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公安문제연구소 서무과장이 나와 항의서한을 접수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 경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公安문제연구소 연구소장과 연구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박형숙 기자

-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51612